

올 여름 해수욕장 안전 관찰을까...

해경, 인력 철수 연안해역 순찰... 도·소방본부, 민간요원·수상구조대 투입

도내 5개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도래했다. 하지만 작년과 달리 해양경찰이 해수욕장에서 철수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해수욕장 가운데 금능·협재·곽지·이호·함덕 해수욕장이 이날 조기 개장했다. 나머지 해수욕장은 다음달 1일 개장한다.

이날 개장한 협재해수욕장을 가보니 주말을 맞아 물놀이를 하기 위한 도민과 관광객들이 해변에 가득 들어차 있었다. 하안 모래사장 위에서는 텐트와 파라솔 등을 설치해 일광욕을 즐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바다로 들어가 수영을 즐기는 피서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선선한 날씨 때문인지 수영을 하는 피서객들은 다소 추운 기색이었다.

안전요원들은 사고에 대비해 배사장 곳곳에 배치돼 있었으며, 수영 경계선에는 요원들이 피서객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실



22일 개장한 제주시 협재해수욕장에는 물놀이를 즐기러 온 도민과 관광객들로 붐볐다.

송은범기자

제 수영 경계선을 넘은 한 피서객이 안전요원에 의해 다시 경계선 안쪽으로 유도되는 상황도 목격됐다.

하지만 매년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올해는 해수욕장에 상주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안전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해수욕장 대신 사고 위험이 높

은 갯바위와 방파제, 선착장 등 연안 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한 본청의 지침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은 민간요원을 모집해 해수욕장에 배치,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해경의 전문성을 따라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나마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전문 구조 능력을 갖춘 119대원 30명이 포함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기로 한 상태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수욕장 안전 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제주공항 터미널 지붕 부실시공 의혹 공항공사 조사 착수... "설계와 다른 시공 제보"

제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확충 공사 과정에서 여객터미널 지붕 덮개가 부실 시공했다는 의혹이 일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전수 조사에 나섰다.

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지난 21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제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지붕 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부실 시공되고 지붕 고정장치가 임의로 제거됐다는 제보가 있어 즉시 현장 확인을 통해 (의혹을) 검증하고 있다"면서 "시공사와 감리단(CM)이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지붕

공사 과정에서 알루미늄 곡선면 지붕을 집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안전진단 후 감리단의 승인 아래 지붕을 지지하는 클립의 간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설계에는 1.2m마다 클립 3만 3000여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시공에서는 간격이 0.6m로 더 좁아지고, 클립 사용 수량도 5만 8000여개로 2만 5000개가 초과됐다.

한편 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사업비 1639억원을 투입해 제주공항 여객터미널을 9만 5795㎡에서 12만 689㎡로 증축하고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상민기자

60만원 빛 때문 지인 살해 40대 '징역 25년'

돈을 갖지 않는다고 독촉하는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 18일 오후 7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의 한 도로 차 안에서 지인인 A(36)씨와 채무 변제 문제로 다투게 되자 흥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현장에서 100m 떨어진 숲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와 제주도 대정읍 소재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된 사이로,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렸지만, 40만원만 변제하

고 나머지 60만원은 갖지 못한 상황이었다.

범행 당일 김씨는 우연히 만난 A씨에게 60만원에 대한 독촉을 받아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숲속에 유기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떼고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더 휘발유를 차량 내부에 뿌려 불을 지르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A씨의 것이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지법, 전 도의원 벌금형

지난해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불거졌던 '당원명부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위원과 40대 당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의원 A(63·여)씨와 당시 문대림 캠프 자원봉사자 B(48·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31일 문대림 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당원명부 엑셀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당원명부를 자신이 치르는 도의원 후보 경선에 활용했지만 상대 후보에게 패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해당 명부는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정보가 있어 유출될 경우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송은범기자

질주하던 전기차 '급브레이크'

5월 기준 1550대 증가... 전년비 22% 그쳐 보조금 축소·차고지증명제에 구매력 하락

지난해 6000대를 넘어섰던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등록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 6588대로 제주도 1만 2625대, 서귀포시 3963대이다. 용도별로는 자가용이 1만 2570대로 가장 많고 렌터카 2925대, 택시 561대, 버스 103대, 관용 429대 등이다. >> 표 참조

지난해 말 1만 5549대 기준, 폐차 등을 제외하면 1550대가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6947대가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22.3%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은 속도를 유지할 경우 올 한해 등록대수는 지난해 등록대수의 절반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자동차 보유 및 운행현황

지역	대수	등록연도	대수	용도	대수
계	16,588	계	16,588	계	16,588
제주시	12,625	2019	1,550	자가용	12,570
서귀포시	3,963	2018	6,947	렌터카	2,925
		2017	3,421	택시	561
		2016	2,629	버스	103
		2015	2,041	관용	429

이처럼 전기차 구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제주도가 올해 차량별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최대 400만원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보조금이 올해 수준으로 줄어든 경우 1회 충전후 주행거리가 400km 안팎으로 인기가 높은 차량 구입비는 4000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 전기차 증가 폭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제주 전역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는데, 그동안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전기차도 적용받아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면서 이 또한 전기차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지난해는 렌터카 신규등록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렌터카총량제 시행으로서 증가가 허용되지 않은 것도 전기차 증가세가 한풀 꺾이는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전기차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대폭 낮아지면서 제주자치도가 올해 목표로 삼은 6000대 보급이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일찌감치 탄소없는 섬을 표방하며 전기차 보급을 시작해 2030년까지 37만 7200대 보급을 계획중인 제주도의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 제외대상인 소형차량과 기관단체별로 공동구매 등을 통한 할인 혜택 제공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LNG복합 화력발전소 특혜 증거 제시하라"

화순리 주민들, 기자회견

화순리 주민들이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갈등 조정하는 한국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이하 제주지부 노조)는 화순리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지부 노조는 지난 13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소재 LNG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관련 조사 결과 건설업체와 화순리장 간의 불공정 계약과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며 이에 대해 진상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화순리 주민들은 "제주지부 노조가 주장하는 의혹은 화순리 마을의 명예와 주민들의 자존심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건설업체와 화순리장 간의 불공정 계약·불법행위를 증명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지부 노조의 무책임한 폭로는 제주도민의 복·행복을 위해 발전소 건설을 승인해 준 2900여명의 화순리 주민들의 양보 정신을 모독한 것"이라며 "즉각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석기자

그랜드보청기

국보보청기 특별 할인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샴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최대 60% 파격 할인

-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방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 고급 모델 1+1(원플러스 원 행사)
- 착용 보청기 A/S 및 무료청력검사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안내
- 청각장애인 보조금 상한선 131만원 안내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소날건업
내소날 FRP 페인트 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내통신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설비공사
- ▶ 전관방송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사무실 임대

위치 한라일보사 1층
(제주시 서사로 154)

전용면적 175㎡(분할가능)

용도 사무실용

주차장 완비

문의 064-750-2530